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와 신흥안보협력: 기후변화·보건·원자력 안전관리 의제를 중심으로

김 유 철*

• 요약 •

이 글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핵심의제로 신흥안보협력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017년 11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공식 천명한 이래, 일본·호주·인도 유럽·아세안 각국은 자국 나름의 인태구상을 발표하였고, 한국 역시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 국가의 인태전략은 ‘억제전략과 해징전략의 결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결국 미·일·호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전략을 포함하는 국가군과 특정 국가를 겨냥한 포괄적 안보 동맹 성격의 연대를 여전히 꺼려하는 아세안 국가군의 이해관계가 포괄적 원칙하에 절충된 것이 인태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인태전략 구상에 참여하는 동류국가 간 협력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국 정부의 역할 제고를 위해 소다자주의에 입각한 신흥안보 관련 여러 협력 의제를 발굴·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러 신흥안보 의제 중, 환경·보건·원자력 안전 이슈가 위협인식의 포괄성 및 한국의 국익 합치성 면에서 정책적 효용이 높으므로 이 분야와 관련된 다자협력 플랫폼을 구축·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맺는다.

주제어 : 인도태평양 전략, 신흥안보, 소다자주의, 아세안, 해징전략

I. 서론

우리 정부는 2022.11.11~11.15일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 덕성여자대학교

전략'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그간 한반도에 간혀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¹⁾ 우리 정부는 또한, 2023년 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공식 소책자를 발간하여, 인태전략의 비전, 협력 원칙, 지역적 범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명확히 밝혔다.²⁾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구상 발표가 발단이 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산은 일본·호주 인도 등 속칭 ‘쿼드(QUAD)’ 국가들은 물론, 최근 프랑스·영국·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자국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가속화되어 역내 안보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정책기조가 어느 정도 형성·확산된 상황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역시, 당시 핵심 지역주의 전략으로 추진중이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전략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한 바 있다.³⁾ 이러한 전략적 환경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 하였으나, 신남방 정책에 상응하는 구체적 지역주의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던 현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한국관 인태전략의 천명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⁴⁾

문제의 소재는 인태전략의 확산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기존의 연구·정책 분석에서 그 성격이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이 천명한 인태전략 구상의 내용, 배경, 전략적 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이들 국가들의 연대를 유지·강화할만한 구체적 정책의제 역시 제시되지 못하였다. 일부 연구는 ‘위협균형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을 차용하여, 대중 위협인식의 확산이 인태전략 확산의 원인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⁵⁾, 인태전략을 발표한 국가군 중 높은 수준의 대중위협인식을 공유하는 쿼드그룹 마저 아직 반중 ‘동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인태전략구상 역시 중국의 참여를

1) 대통령실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zHnFjS6L> (검색일: 2022.12.15.)
2)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 (검색일: 2023년 3월 15일)
3) 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93> (검색일: 2022.12.15.)
4) 대통령실 홈페이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target=5 (검색일: 2022.12.15.)
5) 예를 들어 다음의 연구를 참조.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4권 2호, 2021, pp.125-126.

유도하는 ‘개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배경하에서, 이 글은 “각국이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격과 이러한 확산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핵심 연구질의로 상정한다. 나아가, “현재의 전략적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연대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 의제는 무엇인가?”의 질의 역시 탐구한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 글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은 물론 다양화·다층화하는 안보위협을 포괄적으로 억제하고 위협을 회피하려는 전략, 즉 ‘억제와 헤징의 결합’ 전략이 각국 인태전략 구상의 공통요소라고 제시한다. 이는 특정 국가를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주로 군사안보 관점에서 공동대응을 기획하는 다자동맹과는 구별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들 국가군 간 전략적 연대의 유지·강화를 위해 단순히 가상적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과는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은 각국의 인태전략과 양립하는 협력의제로 ‘신흥안보 협력’을 적시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적응, 보건협력, 원자력에너지 안전관리 협력을 우리 정부의 잠재적 기여도가 높은 의제로 제시한다. 세 이슈 모두 선진국-개도국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독특한 역할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협력의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선, 헤징이론의 관점에서 인태전략 구상의 확산 추이 및 각국 인태전략의 공통점·상이성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 간 협력 기조 유지·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이슈의 효용성을 분석한 후, 제시한 신흥안보 관련 세 이슈가 어떻게 우리 국익 및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하겠다.

II.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확산과 진화: 억제(deterrence)와 헤징(hedging)의 결합

상기한 여러 버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산을 추동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오랜 시기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해 온 미국은 중국의 경제·군사력 신장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대외전략의 중심을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는 소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전개하였다. 여러 형태의 대중견제가 구체적 정책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바, 2017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천명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은 인태전략의 비전이 미국 최고지도자에 전달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⁶⁾ 이후 이러한 비전은 국방부가 작성한 ‘인

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된바, 동 보고서는 규칙 및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기반한 개방된 역내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타파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하였다.⁷⁾ 동 보고서는 특히 중국을 91차례나 언급하면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과 역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⁸⁾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대내외 정책 기조에 전환을 시도하면서도 전반적인 대중압박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만큼은 상당 부분 승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월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전 세계의 미래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향후 수 십년간 번영할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바 있으며, 백악관이 직접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⁹⁾ 동 보고서는 동맹국과의 협력 및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미국의 역할 강화, 동맹국들의 집합적 능력 구축, 지역기구와의 협력(Strengthen the U.S. role and build collective capacity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with regional institutions)”을 인태전략 목표 실현의 방식으로 적시하고 있다.¹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 구상을 내놓으면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입각하여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하는 등 역내 국가에게 인태전략 동참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자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 면에서 한계를 보인데 반해,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글로벌 동맹국 우방국의 팀워크를 중시하는 한층 진일보한 ‘인도-태평양 전략 2.0’으로 볼 수 있다.¹¹⁾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상 확산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특히 일본과 호주는 공동기획에 가까운 적극적 역할을 행사해 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 1기 내각 시절이던 2007년, ‘두 해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 및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과 호주를 포함하는 확대 아시

6)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https://vn.usembassy.gov/20171110-remarks-president-trump-apec-ceo-summit/> (검색일: 2022.12.18)

7)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June 1, 2019. (검색일: 2022.12.18.)

8) 김주리,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2019년 겨울호, p.49.

9)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검색일: 2022.12.18)

10) Ibid., p.10.

11) 송승중,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韓日軍事文化硏』 第31輯, 2021, p.90.

아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¹²⁾ 주창 시점만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개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외교정책에 반영한 국가로 볼 수 있다.¹³⁾ 호주 정부 역시 이미 2013년 국방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규정 한 바 있는데, 이는 인태지역을 국가전략 대상으로 명시한 최초의 정부 공식문건으로 평가받는다.¹⁴⁾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요 지정학적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오히려 일본과 호주가 빨랐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리더십 아래 이들 국가가 쿼드와 같은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쿼드 국가 중 인도는 미·일·호와 구별되는 다소 독특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도크람 분쟁 및 진주목걸이 전략 등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그 어느 국가보다 강한 대중 위협인식을 가지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 대상을 달리하는 '다중 연계 전략'을 전개하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방위산업 협력과 같은 이슈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기도 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해양안보 분야에서는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¹⁵⁾ 그러나, 2019년 개최된 미-인 2+2 장관회의에서 국방기술 교환 협정을 맺고, '타이거 트라이엄프(Tiger Triumph)'로 명명된 인태지역에서의 공동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등 최근에는 대중위협인식이 한층 강화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¹⁶⁾

아세안 국가들 역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인태전략을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가 대중견제 동맹으로 인식되는 것에는 반감을 표명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2019.6 발표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이라는 공동결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동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간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공간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⁷⁾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쿼드 국

12) 정구연 외,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 p.6.

13) 이기태,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2호(통권82호), 2021, pp.79-80.

14) Rory Medcalf, "In defence of the Indo-Pacific: Australia's new strategic map,"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4, 2014, p. 470.

15) 김유철, "부동국가(Swing State)로서의 인도: 외교노선의 진화 경로와 미국과의 이해관계 수립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0집 1호, 2020, pp.172-185.

16) Jagannath P. Panda,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in Indo-Pacific and India's Perception: A Power-Partner Conten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30, no.127, 2021, p.2.

17)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asean.org/asean2020/wp-content/uploads/2021/01/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 (검색일: 2022.12.18.)

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 발표에 의해 정작 이 전략의 지리적 중심에 놓인 아세안 국가들의 중심성이 도전받고, 해당 지역이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경제 협력과 연계성 강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¹⁸⁾

인도-태평양 전략이 포괄적 구상·연대로 ‘확산’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여러 유럽 국가들의 자국관 인태전략 구상의 발표이다. 유럽 역내에서 이를 주도한 국가는 프랑스로서, 마크롱 대통령이 2018.5월 인태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이듬해 3개의 인태전략 관련 문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¹⁹⁾ 프랑스의 인태전략 동참은 프랑스가 이 지역에 가지는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에 많은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영해 수호를 위해 약 8,300여명의 병력 및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이러한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프랑스의 동참은 차치하고,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에 ‘시민권력(Zivilmacht)’의 영향력이 강하여 대외문제에 직접적 개입을 꺼리는 독일까지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Leitlinien zum Indopazifik)’을 발표하고 동참을 천명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일이다. 이는 인태전략이 단순히 대중위협에 비대칭적으로 노출된 소수 국가그룹만이 공유하는 정책의제라는 의미를 넘어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에서 안보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적·보편적 연대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 역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고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가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추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²²⁾ 또한, 중점 추진 과제로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②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 비확산 대테러 협력 강화, ④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

18) 조원득,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시사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48, p.8.

19)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4, p.1.

20)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4권 2호, pp.131-132.

21) 임태훈·이은채,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에 대한 영향: 양국 역내전략간 상호연계 및 보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4호, p.469.

22)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10.

도, ⑧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설정하였다.

〈표 1〉 주요국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핵심내용

국가명	핵심문서	주요특징
미국	백악관(2017.12), 「미국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방부(2019.6),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국무부(2019.11),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비전의 추구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백악관(2022.2),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이튼 시기 동맹국과의 협력 중시 기조로 변동
일본	아베총리 연설(2016.8),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 외무성(2018.12),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및 일본의 역할 증대 강조
호주	국방부(2016.2), 2016 국방백서(2016 Defence White Paper) 및 인도태평양 전략 제시 외교부(2017.11), 2017 외교백서(2017 Foreign Policy Paper) 발표 국방부(2020.1), 2020 국방 전략백서(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발간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및 호주의 역할 증대 강조
인도	모디 총리의 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2018.6), 인도의 ‘포용적 인도태평양(inclusive Indo-Pacific Vision) 천명	인도의 전략적 유연성 강조
아세안	아세안 정상회의(2019.6),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공식 채택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개방성 강조. 헤징(hedging)의 성격이 두드러짐.
프랑스	국방부(2019),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국방전략(France’s Defense Strategy in the Indo-Pacific)’ 외교부(2019),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French Strategy in the Indo-Pacific)’ 외교부(2022.2),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France’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및 프랑스의 역할 증대 강조

국가명	핵심문서	주요특징
독일	외교부(2020.9),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Germany-Europe-Asia: Shaping the 21th Century Together: Policy Guideline on the Indo-Pacific Region)’ 외교부(2021.9),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 이행진전 보고서(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erman Government policy guideline on the Indo-Pacific region)’	‘가이드라인’이라는 신중한 명명을 통해 민감성 감소 노력
영국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Tilt)’ 발표(2021.3)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및 영국의 역할 증대 강조
네덜란드	외교부(2020.11),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발표	‘가이드라인’이라는 신중한 명명을 통해 민감성 감소 노력
유럽연합	EU 대외관계청(2021.9), 유럽연합 인도태평양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및 유럽의 역할 증대 강조
캐나다	캐나다 정부(2022.11.30),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Canada's Indo-Pacific Strategy) 발표	타국의 기존 전략을 벤치마킹·편승하는 경향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2023.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포괄적 지역주의와 안보협력 강화

〈출처: 각국이 발표한 공식문건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우리 정부 인태전략 구상의 특징은 신남방정책 등 과거 정부의 지역주의 구상에 비해 안보 협력 요소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동 구상의 ‘포괄안보 협력 확대’에 대한 설명은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여, ‘대중 억제’적 성격의 인태전략 요소를 반영하였다. ‘림팩, 퍼시픽 드래곤 등 역내 다자 간 연합 훈련의 참가’ 의지를 천명한 대목이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군 함정 등 군수물자 지원 강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한 점 역시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²³⁾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향점, 협력 의제의 내용, 중국 반응에 대한 민감도 등 면에서도 각국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⁴⁾ 상기한 바와 같이 쿼드 국가 내에서

23) 위의 글, p.23.

도 인도의 대중 정책노선은 다른 구성국과 그 결을 달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연대가 불필요한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쿼드 국가들 역시 역내·외 국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역내 인프라투자 협력과 같은 ‘비군사적’ 성격과 이슈에 따른 역동적 소다자주의의 형성 운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역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로 안전 및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와 안보 협력을 추구해 나갈 뿐,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인식하는 미국의 인태전략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이러한 인태전략 확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기한 인태전략 참여국 간 연대 수준을 ‘반중 동맹’으로 전제하거나, 인태전략 참여 여부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문제로 치부하는 접근에는 여러 이론적·실증적 문제가 있다.²⁶⁾ 우선, 상기 인태 전략 문서들에 나타난 내용들은 역내 안보위협 관리를 위한 안보 ‘협력’을 목표로 할 뿐 새로운 동맹체제의 형성 혹은 기존 동맹의 확장을 암시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맹은 학술적·이론적으로 “잠재적 혹은 실제적 군사 분쟁에 직면하여 독립된 주권 국가들끼리 군사적 협력을 위해 맺는 공식적 합의”로 정의할 수 있는바,²⁷⁾ 동맹과 인태 전략의 근본 성격은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성급하게 동맹 관련 이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태전략 확산 원인을 진단하는 접근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²⁸⁾

더욱이, 미국 스스로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쿼드의 비군사적 성격 및 인태전략의 개방성·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 역시 이러한 동맹 이론 중심의 해석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반중 동맹으로 인태전략의 지

24) 최원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추진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7, p.5.

25) Wooyeal Paik and Jae Jeok Park,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21, vol.30, no.127., pp.36-37.

26)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은 엘리슨의 저작을 인용하며 미중 사이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한미동맹 구조속에서 ‘방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의 인태전략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박휘락,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 2020, pp.116-119.

27)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ATOP) Codebook, <http://www.atopdata.org>, p.6 (검색일: 2022.12.18)

28)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은 인태전략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 차이를 ‘동맹정체성’의 차이 중심으로 설명하려 시도하나 핵심변수에 대한 피상적 기술만 나열할 뿐,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홍건식, 김승배, “한·미와 미·일의 동맹 정체성: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분수령,” 『OUGHTOPIA』 vol. 36, issue. 1, 2021, pp.93-125.

향점을 가져가려 할수록 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반발 및 저항감은 커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지지 정도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고려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은 역내 이슈의 다층성·복합성을 이해하고, 연성권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인태전략이 TPP 탈퇴와 맞물리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할만한 경제적 자원의 투입을 결여한 것이었다는 반성하에, 역내 인프라 투자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에 반응을 강권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⁹⁾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고려하면, 동맹이론의 틀에서만 인태전략을 접근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선제적 군사적 행동 동참에 따른 일련의 보상을 미국에 기대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인태전략의 확산을 단순히 ‘반중동맹’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인태전략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 글은 ‘미국의 대중 억제전략과 역내 주요국의 헤징 전략 간 결합’이 인태전략 확산의 성격을 가장 잘 규정한다고 본다. 미국이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이유에는 세계경제의 허브로 떠오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같은 잠재적 위협세력을 ‘억제’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지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양국 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위험관리’의 동기가 작용한다.³⁰⁾ 그러나, 경쟁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를 ‘적성국 관계’로 단순 치환하기 힘든 여러 상호의존적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역내 주요국의 대중 위협인식 역시 상당한 편차를 보이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창설은 아직 비현실적 선택이다.

기타 역내·외 핵심국가 역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는 공동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대일로를 포함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범 초기,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었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인도 및 여러 유럽국가가 참여하고, 2019년 기준으로 인도가 63개의 승인 프로젝트 중 1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역내 국가의 양면성을 반영한다.³¹⁾ 상당수의 핵심 역내외 국가에게 미국의 인태전략은 구체성을 결여한 것이며, 지리적 거

29) 김재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의 성격과 성패의 관건,” 『新亞細亞』, 29권 2호 (2022년, 여름), pp.15-16.

30) 이상엽, “미 인도태평양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STRATEGY 21』, Vol. 22, No. 1, Summer 2019, pp.14-22.

31) Jagannath P. Panda, *ibid.*, p.11.

리는 미국의 역내 개입의지에 대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인 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구체적 실익을 안겨주는 것이다.³²⁾ 결국, 이들 국가는 미국과 달리 중국을 ‘억제’ 할 만한 독자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관계 설정을 통해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에 대응해야 하나 대중 경제협력이 주는 기회요인에 따라 ‘헤징 전략’을 일종의 최적 전략으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본래 금융용어에서 파생한 헤징전략은 선물·외환 시장 등에서 상반되는 두 옵션에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국제정치 맥락에서는 “특정 안보 위협에 노출된 국가가 균형·편승·중립과 같이 매우 명쾌한(straightforward) 대안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국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양자택일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³³⁾ 거의 모든 국가 인태전략에 빠짐 없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 독일·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 역시 ‘가이드 라인’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점,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개방성이 특히 강조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은 이러한 ‘헤징 전략’의 면모가 성격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억제전략과 헤징전략의 융합’이라는 인태전략 확산의 성격에 조응한 최적의 협력의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이 글은 이하에서 환경·보건·원자력 안전 규정 등의 신흥안보 이슈가 유력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러한 신흥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대부분 국가 인태전략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경성 군사안보 협력이 가지는 대중관계 민감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역내 개발도상국가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여지가 커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이 크다는 점, 이미 우리 정부가 밝힌 9가지 중점 추진 과제와 접점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III. 신흥안보협력의 등장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한 정책 효용성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란 미시적 개인적 차원의 안전(individual safety) 문제가 특정 사건 발생 등에 의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이슈 간

32) 오윤아,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의 의의와 한계,” 『국제·지역연구』 30권 1호 2021, p.84.
33) Cheng-Chwee Kuik et al., *Light or Heavy Hedging: Positioning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eoul: Korea Economic Institute, 2014).

질적 연계성이 커지면서 거시적 차원의 일반안보(general security) 문제로 창발하는 현상을 일컫는다.³⁴⁾ 이러한 신흥안보 개념은 잠재적 적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대처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안보와 대비된 ‘비전통안보’ 개념과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국가안보와 잠재적 안보이슈로 전환 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은 위협들 역시 안보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이점 역시 지닌다.³⁵⁾ 이러한 안보이슈로 전환될 잠재성을 가진 위협요인으로는 해킹 및 사이버 공격, 공급망 안전,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난민의 대량 발생, 안전사고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은 공동체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안보’ 이슈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안보 영역에 포섭하는 적극적 노력을 수반하는바, 이를 안보화(securitization)이라고 한다. 안보화 과정은 목표청중(target audience)이 특정 현상에 대한 위협인식을 변화하도록 이를 주도하는 행위자가 전략적으로 은유(metaphor), 정책적 도구(policy tools), 이미지(image), 유비(analogy) 등 수사구조를 활용하는 여러 화행(話行, Speech-Act)을 포함한다.³⁶⁾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 식량·수자원 고갈로 인한 국가 간 분쟁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국가 및 해안지대 도시 수몰 위험 등 잠재적으로 강한 ‘안보’적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위협인식은 “기후변화는 수 천개의 핵폭탄과 같은 안보적 위협이다”와 같은 수사, 각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이러한 과정은 기후변화 이슈를 점차 ‘안보’ 이슈로 자리매김하게끔 만든다.³⁷⁾

이러한 신흥안보 이슈는 인도태평양 전략 확산의 맥락에서 협력의제로서 높은 효용성을 지닌다. 그 이유로는 우선, 상기한 인태전략의 여러 소다자주의 플랫폼과 높은 합치성을 들 수 있다. 상기한바와 같이,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이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 그리고 신흥안보이슈가 하나의 협력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공통분모를 가질 뿐, 구체적 협력의제 및 그 실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 ‘방식’과 이를 위를 위한 각국의 역할 분담은 여전히 형성·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이슈별로 그룹핑을 달리하여 정책 플랫폼이 형성·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34) 김상배, 신범식 편, 『한반도 신흥안보와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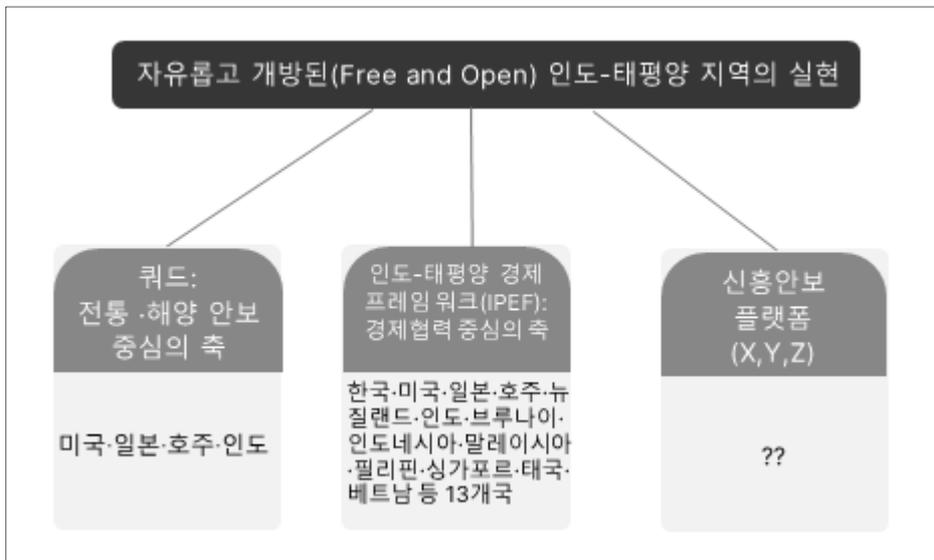
35) 윤정현, “신흥안보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3호, 2019, p.4

36) Thierry Balzacq, *Securitization Theory: How Security Problems Emerge and Dissolve* (Milton Park: Routledge, 2010), p.3.

37) 김유철, “신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3호, 2021, pp.19-23.

인태전략이 지향하는 소다자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여러 이슈별로 인태전략 실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도식화 한 것이다. 유념해야 할 점은 쿼드와 같이 이미 상당 정도로 협력 관행을 형성해온 국가그룹 및 정책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쿼드-플러스’ 구상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존 정책 플랫폼의 대상 이슈와 구성국을 확장하는 방식의 인태전략 발전 로드맵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 구성국이 아닌 ‘플러스’에 해당하는 후발주자라는 정책 효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만해협·남중국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압박 가능성 등 연루의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층적·복합적 소다자 협력 플랫폼>

관련하여 미국이 2022.5.20~24일 기간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의 발족을 공식 천명한 데에서 보듯, 경제와 무역 측면에서는 별도의 정책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층적·다층적 인태전략 실현방안을 추진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역시 일대일로구상과 같은 경제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계된 복잡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대응방식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IPEF는 ① 경제연결성(Connected Economy), ② 경제회복

력(Resilient Economy), ③ 청정경제(Clean Economy), ④ 공정경제(Fair Economy)의 네 개 중심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국은 자국이 참여할 핵심축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³⁸⁾ 이처럼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전략의 정책 플랫폼은 보편성 확보를 목표로 매우 유연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신홍안보 정책 플랫폼 구축 노력은 우리 정부 스스로 천명한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와 긴밀한 정합성을 지닌다. 현 정부는 ‘신홍안보위원회·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를 고려할 정도로 신홍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홍안보 정책 플랫폼 구축을 인태전략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 역할로 규정 추진하는데 위화감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³⁹⁾ 사실, 전통안보와 같은 기성 국제정치 무대의 지평을 넘어 환경·보건·인권·난민·기술·정보·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 내는 ‘신홍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건설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담론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인태전략의 확산’이라는 상기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에게 바로 그러한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기회인 것이다.⁴⁰⁾

셋째, 신홍안보 정책플랫폼 구축 노력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인도와 상당 기간 쌓아온 협력의 관행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다. 전임 문재인 정부하에서 추진된 ‘신남방정책’은 활발한 정상외교 및 ‘사람(people)·상생(prosperity)·평화(peace)’로 요약되는 사회,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다각적 협력 노력으로 인도-아세안 국가들에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와 정책일관성에 대한 나름의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 있다.⁴¹⁾ 특히, 신남방정책 추진 3년차이던 2020년에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구상’은 7대 중점 분야 주요 추진 사업중 하나로 ‘비전통안보 협력’을 적시하고, ‘기후변화, 재난, 테러 및 환경오염 방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한바 있다.⁴²⁾ 이러한 협력 노력은 인도-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며, ‘인태전략의 확산’이라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틀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8) 강선주,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17, p.4.

39) 김인엽, “경제안보 총괄 신홍안보위, 총리실에 만든다,” 『한국경제』 (2022.3.1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1853961> (검색일: 2022.12.18.)

40) 김상배, 『신홍무대의 중견국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0), pp.14-16.

41) 조한범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1-34, pp.204-207.

42) 최원기, “신남방정책 플러스: 중점분야와 추진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2, p.6.

IV. 기후변화·보건·원자력 안전 이슈의 전략적 안보화구상과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정책 플랫폼 구축

이 글은 여러 신흥안보 협력 이슈 중에서도 기후변화·보건·원자력안전 이슈의 정책 효용성에 주목하는데, 이들 이슈는 글로벌 차원의 관련 국제기구·제도·규범이 존재하여 상기한 ‘안보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의 공헌 외교 목표와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 협력 추진이 한국의 가시적 국익 실현에 공헌한다는 점이 등이 고려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제는 한정적 열거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이슈들이 ‘신흥안보’의 틀에서 다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관련 정책 플랫폼 구축·운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인태전략 확산의 전체적 틀 안에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에 입각한 역동적 그룹핑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소다자주의란 “특정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한 최소한의 국가들의 연합체를 통해 여러 다자적 이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0여개국 이하의 국가그룹을 의미한다. 소다자주의는 여러 보편적 국제기구가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 등에 따른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보편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상실해 가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안 모색 등을 원인으로 여러 형태의 다자협력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³⁾

사실, ‘신흥안보’라는 개념의 범주는 매우 넓으며, 이미 존재하는 역내 협력체 혹은 향후 창설·운영될 수 있는 여러 협력체를 상당 부분 포괄하면서도 ‘재편(reshuffling)’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관련 협의체 창설·운영을 주도하기에는 권력 자원이 제한적인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정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기후변화·보건·원자력안전관리의 세 이슈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살펴보겠다.

1. 인도-태평양 기후변화 협력 플랫폼

신흥안보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주는 기회요인은 위협인식에 대한 보편성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대응체제의 조직화·제도화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국 간 상보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43) 민병원, “소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개념, 기능, 효과-,” 『통일연구』 제22권 제2호, pp.181-185.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오래전부터 주요 선진국 과학자 커뮤니티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오던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인간 생존환경에 미치는 도전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 기술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물, 식량, 건강, 토지, 생물 다양성, 해안도시 안전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정보기관 역시 기후변화를 큰 안보적 도전으로 적시하고 있다.⁴⁴⁾

기후변화 문제가 안보 이슈로 전환되는 구체적 양태는 그 다면성·복합성으로 인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위협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태풍 해일 홍수 등의 자연재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기상학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상승한 바닷물의 온도가 더욱 많은 에너지를 태풍에 공급하여, 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태풍의 강도가 약 12~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특히나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개도국에 큰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2022년 10월 파키스탄을 강타한 대홍수를 예로 들면,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약 1천7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무려 400억달러(57조 4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⁴⁶⁾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ACDM+ROK,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plus Republic of Korea)’를 발족하여,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⁴⁷⁾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아세안 재난관리 비상대응협정(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에 기반한 아세안 역내 다자협력 관행을 적극 활용한 것인바, 아세안 국가들은 동 협약의 실현과 모멘텀 유지를 위해 일종의 이행계획인 ‘AADMER Work Program 2021-2025’를 발표하고, “재난에 탄력적인 회원국 건설”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확산 및 연계성의 맥락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존 정책 플랫폼의 참여국·대상이슈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세안 국가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태양양·인도양의 군소도서국 역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44) 김유철, “신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의 비교를 중심으로,” pp.16-18.

45) Wei Mei and Shang-Ping Xie, “Intensification of landfalling typhoons over the northwest Pacific since the late 1970s,” *Nature Geoscience*, Sep. 2016.

46) 김영현,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추산액 57조원으로 ‘깡충,’” 『연합뉴스』 2022.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0087800077> (검색일: 2022년 12월 18일)

4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한-아세안, 안전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아세안공동체 구축,” 2022.6.2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54> (검색일: 2022.12.18)

있다. 또한 유사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들 역시 양자적으로 중첩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안·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플랫폼하에서 다자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뛰어나므로 이를 선호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파리협약상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제4조)뿐 아니라, 적응(제7조), 기후재정(제9조), 기술이전(제10조) 등의 포괄적 의무를 지며, 이는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갱신·보고 되어야 한다.⁴⁸⁾ 2021.10월 수정 발표한 우리 정부의 NDC는 전체 감축량(2억9100만톤) 중 12% 정도를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 등 해외 감축분의 이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드시 감축분에 여유가 있는 파트너국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막 합류한 것으로 인식되는 우리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정 지원 및 친환경 기술 이전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태전략 확산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은 우리의 공여를 필요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 프로젝트의 상보성이 큰 개도국이 대부분 인도-태평양 연안국가라는 점에서 큰 효용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21년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회의의 서울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P4G 서울회의에서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 한다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기후변화 문제가 안보 및 기타 이슈와 가지는 연계성을 환기시킨 바 있다.⁴⁹⁾ 더욱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보고서가 적시하고 있듯이, 많은 역내 국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확산·고도화를 중점 협력 의제로 인식하고 있는 등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 사업과 현지의 실 수요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는 ‘신흥안보’의 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추진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⁵⁰⁾

48) Daniel Bodansky et al,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2017), pp. 231-246.

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전문,” 2021년 5월 3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207> (검색일: 2023년 1월 18일)

50) ESCAP, “The Race to Net Zero: Accelerating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https://reliefweb.int/report/world/race-net-zero-accelerating-climate-action-asia-and-pacific?gclid=Cj0KCCQjwpPKiBhDvARIsACn-gzCbXzP93ynomPlygETsVEpdKtT2P6AnJ6eMRg_6bJGLLLkOy0K14L8aAnEIEALw_

2. 인도-태평양 보건안보협력 플랫폼

보건안보 관련 협력 프로젝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안의 소자다주의 구축·운용을 위해 매우 유용한 의제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다수 국가들은 열대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보이며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등을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농촌 및 산악 지역에서 동물의 사육과 인간의 거주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의 발생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높다. 이러한, 만성적 보건안보 위협요인으로 인해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일찍이 긴밀한 협력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80년대에 이미 ‘아세안 보건장관회의(AHMM: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및 공동선언문 도출의 결과로 나타났다. 아세안 가입국가 학대에 따라, 2000.4월에는 10개국으로 구성된 제5차 아세안보건장관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발생이라는 역내 보건안보 위협요인의 등장은 보다 확대된 틀에서 국가 간 공조체제 구축을 가능케 하였는데, 당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지도자들은 특별보건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질병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을 결정하고 국경 통제 및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바, 아세안+3 신흥전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이하 EID) 프로그램의 설립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⁵¹⁾

코로나-19 방역 역량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20년 9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발족·운용한바 있다.⁵²⁾ 이러한 구상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협력체를 통해 상대적으로 다자협력이 약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력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었다.⁵³⁾ 한-아세안 차원에서는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보건안보협력 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⁵⁴⁾

wcB (검색일: 2023년 2월 21일)

51) 백용훈,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Health Security),” 『동아연구』 제39권 2호(통권 79집, 2020), pp.25-28.

52) 외교부 보도자료,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 개최(3.30.),” https://www.mofa.go.kr/w/w/brd/m_4080/view.do?seq=3710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2.12.18)

53) 장영덕,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 다자협력의 관점에서,” 『평화학연구』 vol. 22, issue.4, 2021, p.9.

이러한 기존 협력 플랫폼을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전략적 구상의 확산에 발맞추어 참여국 협력이슈를 리서플링·재조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비용합리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상기한 인태전략 확산의 경향에 조응하여 역내 보건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호주·아세안 각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협력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⁵⁵⁾ 단순 포럼 개최를 넘어 보다 제도화된 ‘정책 플랫폼’의 구축·운용을 우리 정부가 주도한다면, 인태전략의 목적 실현 및 우리 정부의 위상 제고라는 전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밝힌 9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포괄안보 협력 확대’ 부분의 설명에서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팬데믹 국제협약 협상과 감염병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개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보건 관련 국제레짐은 큰 전환 과정에 있다.⁵⁶⁾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2월에 밝힌 글로벌 팬데믹 조약은 “팬데믹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적재산권의 포기 권장, 백신의 1/5 (20%) 이상은 WHO에 기탁되어 저소득 국가 및 취약 계층에 제공하고, 그 가격과 계약은 공개”하는 등의 개도국의 필요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⁵⁷⁾ 과거 기후변화 협상이 그러했듯, 협상의 주요 쟁점 및 국가 간 갈등축이 명확히 대두된 이후에는 주요 협상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태지역 차원의 협의 플랫폼 창설 등 우리의 전략적 공간 창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인도-태평양 원자력 안전관리 협력 플랫폼

원자력 안전관리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의미하며,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한 안전기준 설정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⁵⁸⁾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여러 원전사고에서 확인된 그 파괴성으로 인해 원전안전관

5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국과 아세안, 보편적 의료보장과 보건안보 협력 논의,”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1487&page=1 (검색일: 2022.12.18.)

55) 외교부 보도자료, “인태지역 백신안보를 위한 한·미·호·아세안 협력 확대-제2차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협력 포럼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625 (검색일: 2022.12.18.)

56)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24.

57) Nature Editorial, “Global pandemic treaty: what we must learn from climate-change errors,” 07 February 2023,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0339-z>(검색일: 2023년 3월 15일)

58) 「원자력안전법」 제2조2항.

리 문제는 안보위협에 준하는 요인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원전 보유국들은 국가주도의 강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법령에 기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주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동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상설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⁵⁹⁾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 확률로 추정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불확실하고 인공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실제 보다 그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⁶⁰⁾ 따라서, 원자력안전관리는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사회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전대미문의 파괴적 사고를 겪은 일본은 그제서야 원자력 추진기구와 규제기구의 분리를 권고하는 원자력 안전협약의 권고에 호응하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및 원자력 규제청을 설립·운영하기에 이르렀으나, 위험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⁶¹⁾

기후변화 이슈가 안보화되는 경향 속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로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고도의·기술적 행정적 역량을 요구하는 안전관리 체계는 원전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노력이 다각도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IAEA의 틀 안에서 체결된 정부 간 협정인 ‘아태지역협력협정(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동 협정은 안전관리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협력 플랫폼으로 평가 받는다. 이 외에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원전 안전규제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아시아원자력원전네트워크(ANSN: The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및 일본이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Forum Nuclear Cooperation in Asia)’ 등이 존재한다.⁶²⁾

미국 역시 이미 90년대 말, ‘태평양지역원자력공동체(PACATOM)’ 등 포괄적 지역 원

59) 「원자력안전법」 제6조, 제7조.

60) 김길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2015 겨울), pp.159-161.

61) 안선희,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52권 제2호(2018 여름), pp.269-270.

62) 배영자, “동북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김상배·신범식 엮음,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pp.110-111.

자력 협력협의체를 구상한 바 있다. 이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모델로 역내 국가들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및 통제 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상되었는데, 특히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및 상업적 이용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역내 비확산체제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창된 바 있다.⁶³⁾ 이러한 구상은 지전략적 공간으로서 아시아태평양이 뚜렷한 제도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모멘텀을 잃어버리면서 구체화하지는 못하였으나, 상기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맞물려 미국이 이러한 정책구상을 선호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관리 정책플랫폼 구축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협응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 국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00년대 말-2010년대 초,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원전도입을 계획 혹은 검토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ASEAN+3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⁶⁴⁾ 현재 우리정부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발족·운영하는 등, 원전수출 확대를 위해 다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22.6월 IAEA가 ‘원자력과 안정된 에너지전환(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 발간을 통해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 시대로 가기위한 과도기적 에너지로 적시한 점, 세계 원전시장에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향후 해외원전 수주가 당분간 어렵게 된 점 등은 이러한 노력에 상당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⁶⁵⁾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에서 원자력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갖춘 원자력 발전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원자력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며,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규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⁶⁶⁾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특히 SMR 등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2021년~2025년으로 설정된 ‘제2차 아세안 에너지 협력 행동계획(APAEC: ASEAN Plan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은 “원자력 과학기술 관련 인적 능력 배양, 원자

63) Robert A. Manning, “PACATOM: Nuclear cooperation in Asia,” *Washington Quarterly*, Spring 1997, p.227.

64)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지정부, ASEAN 지역 한국형 원전수출기반 강화 추진,” https://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56691&bbs_cd_n=16 (검색일: 2022.12.18)

65) 전봉근, “원전 수출을 위한 ‘기회의 창’과 원자력외교 방향,” IFANS Focus, IF 2022-20K Sept. 20, 2022.

66)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p.28-29.

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제고, 원자력 발전을 위한 국제 지역 협력 강화”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정부 인태전략과의 접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⁶⁷⁾

V. 결론

이상에서는 주요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확산의 양상 및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홍안보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플랫폼으로 인태전략을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나, 역내 모든 국가가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홍안보 협력 이슈’는 관련 국가 모두의 정책적 필요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와도 같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보건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대표적 협력의제로 적시하였다. 이러한 협력의제 제시의 이유로는 보편적 위협인식이 형성된 대표적 신홍안보 이슈라는 점, 기존 역내 제도적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추어진 이슈라는 점, 우리의 국익 실현에도 직접적 공헌이 가능한 이슈라는 점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여전히 높은 추상성 및 전략적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백가쟁명식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인태전략의 다면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반중동맹’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대칭동맹의 성격을 가지는 한미동맹의 구조속에서 ‘방기’의 우려가 커진다는 주장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살펴본바와 같이, 다자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판 인태전략의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향유하는 외교적 레버리지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인태전략 구상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여 형태와 내용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국가 역량 향상 및 공세적 대외정책 전개가 만들어 내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은 주요한 지전략적 공간으로 등장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안보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결국, 미국 및 주요 동맹

67) Ryan Toh Jun Shen et al., “Small Modular Reactor (SMR) Deployment towards a Low-Carbon ASEAN Economy,” ASEAN Centre for Energy, Policy Brief, No.15 / November 2022, <https://aseanenergy.org/small-modular-reactor-smr-deployment-towards-a-low-carbon-asean-economy/> (검색일: 2023년 3월 18일)

국·협력국이 전개하는 인태전략은 ‘억제전략과 해징전략의 결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전략자산의 대규모 전개를 포함한 합동 군사연습 등 현재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대중 억제력을 도모하는 미국·일본·호주 등의 핵심 국가군과 향후 중국 대외전략의 공세성에 따라 이러한 공동대응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신호 발송(signaling)에 그치는 해징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군의 이해 관계가 절충된 것이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외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아세안-인도와의 협력 노력을 강화·내실화하는 기회를 향유하며, 소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동적 그룹핑 및 리셔플링은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대중 경제의존을 줄어나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도-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우리 외교 현실에도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길수,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2015 겨울).
- 김상배, 신병식 편, 『한반도 신흥안보와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_____,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김유철, “부동국가(Swing State)로서의 인도: 외교노선의 진화 경로와 미국과의 이해관계 수립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0집 1호, 2020.
- _____, “신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3호, 2021.
- 김재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의 성격과 성패의 관건,” 『新亞細亞』, 29권 2호, 2022년, 여름
- 김주리,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2019년 겨울호.
- 박휘락,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 2020
- 백용훈,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Health Security),” 『동아연구』 제39권 2호(통권 79집, 2020).
- 송승중,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韓日軍事文化研』 第31輯, 2021.
-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4권 2호, 2021.
- 안선희,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52권 제2호(2018 여름).
- 이기태,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2호(통권82

- 호), 2021.
- 이상엽, “미 인도-태평양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STRATEGY 21』, Vol. 22, No. 1, Summer 2019.
- 오윤아,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AOIP의 의의와 한계,” 『국제·지역연구』 30권 1호 2021.
- 윤정현, “신홍안보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3호, 2019.
- 장영덕,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 : 다자협력의 관점에서,” 『평화학연구』 vol. 22, issue.4, 2021.
- 전봉근, “원전 수출을 위한 ‘기회의 창’과 원자력외교 방향,” IFANS Focus, IF 2022-20K Sept. 20, 2022.
- 조원득,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시사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48.
-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4.
- 정구연 외,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
- 최원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추진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7.
- 홍건식, 김승배, “한·미와 미·일의 동맹 정체성: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분수령,” 『OUGHTOPIA』 vol. 36, issue. 1, 2021,
- Balzacq, Thierry. *Securitization Theory: How Security Problems Emerge and Dissolve*, Milton Park: Routledge, 2010.
- Bodansky, Daniel Jutta Brunnée, and Lavanya Rajamani.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Manning, Robert A. “PACATOM: Nuclear cooperation in Asia,” *Washington Quarterly*, Spring 1997.
- Medcalf, Rory. “In defence of the Indo-Pacific: Australia’s new strategic map,”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4. 2014.
- Mei, Wei and Shang-Ping Xie, “Intensification of landfalling typhoons over the northwest Pacific since the late 1970s,” *Nature Geoscience*, Sep. 2016.
- Kuik et al., Cheng-Chwee *Light or Heavy Hedging: Positioning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eoul: Korea Economic Institute, 2014.
- Paik, Wooyeal and Jae Jeok Park.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30, no.127., 2021.
- Panda, Jagannath P.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in Indo-Pacific and India’s Perception: A Power-Partner Conten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30, no.127, 2021.
- 김인엽, “‘경제안보 총괄’ 신홍안보위, 총리실에 만든다,” 『한국경제』 (2022.3.1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1853961> (검색일: 2022.12.18.)
- 김영현, “과키스탄 대홍수 피해 추산액 57조원으로 ‘경중,’” 『연합뉴스』 2022.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0087800077> (검색일: 2022년 12월 18일)
-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 (검색일: 2023년 3월 15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전문,” 2021년 5월 3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207> (검색일: 2023년 1월 18일)
- 대통령실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zHnFjS6L> (검색일: 2022.12.15.)
- _____,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target=5 (검색일: 2022.12.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국과 아세안, 보편적 의료보장과 보건안보 협력 논의,”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1487&page=1 (검색일: 2022.12.18.)
-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https://vn.usembassy.gov/20171110-remarks-president-trump-apec-ceo-summit/> (검색일: 2022.12.18)
- 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93> (검색일: 2022.12.15.)
-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 개최(3.30.),”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2.12.18)
- _____, “인태지역 백신안보를 위한 한·미·호·아세안 협력 확대-제2차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협력 포럼 개최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625 (검색일: 2022.12.18.)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지경부, ASEAN 지역 한국형 원전수출기반 강화 추진,” https://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56691&bbs_cd_n=16 (검색일: 2022.12.18)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한-아세안, 안전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아세안공동체 구축,” 2022.6.2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54> (검색일: 2022.12.18)
-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ATOP) Codebook, <http://www.atopdata.org>, p.6 (검색일: 2022.12.18)
- ASEAN Centre for Energy. 2022. “Small Modular Reactor (SMR) Deployment towards a Low-Carbon ASEAN Economy,” ASEAN Centre for Energy, Policy Brief, No.15 / November 2022, <https://aseanenergy.org/small-modular-reactor-smr-deployment-towards-a-low-carbon-asean-economy/> (검색일: 2023년 3월 18일)
-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asean.org/asean2020/wp-content/uploads/2021/01/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 (검색일: 2022.12.18.)
- ESCAP, “The Race to Net Zero: Accelerating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https://reliefweb.int/report/world/race-net-zero-accelerating-climate-action-asia-and-pacific?gclid=Cj0KCQjwpPKiBhDvARIsACn-gzCbXzP93ynomPlygETsVEpdKtT2P6AnJ6eMRg_6bJGLLLkOy0KI4L8aAnEIEALw_wcB (검색일: 2023년 2월 21일)
-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June 1, 2019. (검색일: 2022.12.18.)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검색일: 2022.12.18)

Nature Editorial, “Global pandemic treaty: what we must learn from climate-change errors,” 07 February 2023,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0339-z>(검색일: 2023년 3월 15일)

【 Abstract 】

The Evolution of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Emerging Security Issues:
Focusing on the Agendas of Climate Change, Public Health,
and Atomic Energy Safety Management

Youcheer Kim

This paper examines the gist of burgeoning Indo-Pacific strategies and pinpoints the emerging security issues as a core agenda to stimulate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After the release of Trump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Japan, Australia, India, and European countries have declared their own Indo-Pacific strategies. This paper encapsulates the rationale behind the phenomena as 'the combination of deterrence and hedging strategies.' To enhance the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and its role, the paper claim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xplore the cooperative agendas based on the mini-lateralism. Among the many emerging security issues, the paper illuminates utility of climate change, public health, and atomic energy safety management issues that are compatible with Korea's core national interests. The paper concludes that building policy platforms on those areas best serve ROK's national interests.

Key Words : the Indo-Pacific Strategy, emerging security, mini-lateralism, ASEAN, hedging strategy

